

정치권, 김대중 서거 10주기 맞아 “정신 본발자” 한목소리

여야, 한일갈등 관련 ‘김대중-오부치 선언’ 강조 황교안, 추모사 통해 “DJ는 정치보복 없었다”

정치권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18일 한목소리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김대중 정신’ 계승을 약속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다수의 국무위원,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 한반도 및 세계평화, 통합과 혁신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특히, 한일 갈등과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식의 해법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

래비전을 제시했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양국관계가 큰 벽에 서고 말았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국력은 강하고 국민의 지력은 더욱 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를 정치인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셨다”며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역사”라며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도, 분단사상 첫 남북정상회담도, 민족사상 첫 노벨상 수상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표되는 본격적 복지도, 여성부 신설로 상징되는 양성평등

의 제도화도, IT 강국의 기반도, 한류의 바탕도 김 대통령이 만드셨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저희는 김 대통령의 평생의 좌우명인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겠다”며 “김 대통령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대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으며 김 대통령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말했다.

여야 5당 대표들 역시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을 기렸다. 다만 정당별로 메시지는 조금씩 결이 달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였으며 제게는 정치적 스승이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을 저와 민주당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걸었던 민주, 인권, 평화, 통합, 혁신의 길이 이 나라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차 강조하면서 추모했다. 하지만 그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언급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DJ연합을 언급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상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를 배려하고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정치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김 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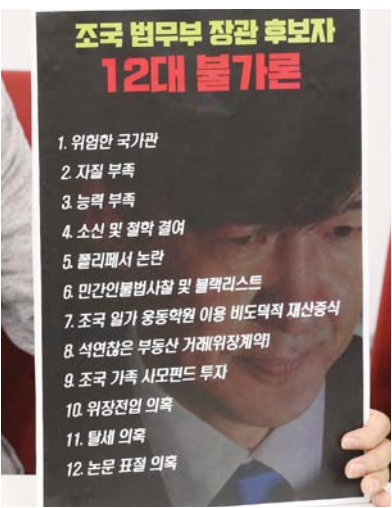
통령을 ‘산맥’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의 인생, 철학, 실천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과 만나선 “후대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게 큰 정치를 배워야 한다”며 “조무래기 정치가 아니라 좀 더 마음을 열고 역사와 마주하는 정치를 했으

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일찍이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을 온 힘을 바쳐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한국당, ‘조국 낙마’ 화력 집중...12대 불가론 제시

관련 상임위·당내기구 망라 ‘T/F’ 구성... ‘위법·위선·위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의 화력을 총결집할 태세다.

한국당은 1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정부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상임위 의원, 법률지원단·미디어

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참여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규정한 12대 불가론은 △위험한 국가관 △자질 부족 △능력 부족 △소신 및 철학 결여 △풀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조국 일가의 옹호위원을 이용한 비도덕적 재산증식 △석연장은 부동산 거래(위장계약)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위장전입 의혹 △탈세 의혹 △논문표절 등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 대책회의에서 “진보는 늘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진보의 도덕성이 바닥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다”며 “특히

조국 후보의 경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들이 많아 이 상임위 위원들과 당 차원의 기구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내정 발표 후 쏟아지는 각종 논란판으로도 이미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농담이다. 애초 조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3대 사유다. 위법한 후보, 위선적 후보, 위험한 후보라는 것”이라며, 특히 “전 재

산 53억원보다 많은 74억원 약정 투자를 했고 그마저도 실제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다.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위선 후보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다 했지만

전부 본인이 앞장 서서 했다”며 “세번째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까지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신을 보면 많은 모순점이 보이고, 말도 많다”며 “이념적으로는 모두 평등하고 같이 살자는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는 반면,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모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특히 법학자로서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탈법적이거나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을 유도내지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후보자의 2중 기준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16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는 왜 이렇게 위장이 많은가. 위장 소송을 했다고 하고 위장 전입에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위장 전향까지”라며 “사노맹 활동 경력을 얘기했더니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1

민주,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에 “황교안 대권놀음...명분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3개월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한데 대해 황교안 대표의 대권 행보라고 규정하면서 “명분이 없는 장외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층이 습관되면 쫓겨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타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한국당은 5월 한 달 간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론 분열만 초래했는데 이번에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한국당의 정치투쟁 정치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면서 “원외인 황 대표에게 장외투쟁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가층이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스트 박근혜를 꿈꾼다면 황 대표의 장외투쟁에 동조해선 안될 것”이라며 “국정 발목잡기를 통한 반사 이익 행거기와 지지층 결집이라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한일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장외투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재차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